



"현안, 외국에선?" (국회도서관)

~22. 10. 6.

목차

※ 클릭 후 파란 글씨 클릭하면 해당 주제로 이동합니다.!

목차	1
들어가기 전에...	2
현안, 외국에선?	3
2022 -18호 통권 제44호	5
2022 -17호 통권 제43호	14
2022 -16호 통권 제42호	14
2022 -15호 통권 제41호	14
2022 -14호 통권 제40호	14
2022 -13호 통권 제39호	14
2022 -12호 통권 제38호	14
2022 -11호 통권 제37호	14
2022 -10호 통권 제36호	14
2022 -7호 통권 제33호	15
2022 -8호 통권 제34호	24
2022 -9호 통권 제35호	33

들어가기 전에...

※ 만약

타 직렬이나 혹은 기타 다른 문서가 궁금하시다면

 "아카이브  " 참조 부탁드립니다...

* 아카이브 및 아카이브에 링크된 모든 구글 문서들은

1. 공적 목적, 비영리적으로만 쓰입니다.
2. 원저작자의 요청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3. 본 문서 작성자는 저작권과 관련해 정부, 국가기관, 공공기관과 어떠한 관계가 없습니다.
4. 폰트는 Nanum Gothic입니다 (<https://hangeul.naver.com/font>)

※ 공공기관이 본 문서 작성자를 후원하지 않으며, 문서 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에 대해 국가, 국가기관, 공공기관과 어떠한 특수한 관계도 없습니다.

※ 문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권리는 대한민국 정부 및 해당 기관, 혹은 정부나 해당 기관에서 의뢰받아 작성한 해당 기업 등에 있습니다. 정부나 해당 기관 혹은 기업에서 삭제 요청시 예고 없이 해당 정보가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든 자료들의 출처는 각 정부기관 등의 홈페이지입니다.

꼭 제 자료가 아니더라도 정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보기 좋게 한군데에 모아두었을 뿐입니다!)

출처 : <https://dl.nanet.go.kr/SearchDetailView.do?cn=SERL1202000062&sysid=nadl>

저작권자 : 국회도서관

공공누리 : 개별

현안, 외국에선?

현안

외국에선? 발간 목록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2022-18호(통권 제44호 2022. 9. 20.)
- 중국의 「대만백서」 발간과 동아시아 외교·안보
2022-17호(통권 제43호 2022. 9. 6.)
- 영국의 '미성년 부모(Young Parents)' 지원 정책
2022-16호(통권 제42호 2022. 8. 25.)
- 일본의 아동 행정 컨트롤타워로서 '어린이 가정청'의 출범
2022-15호(통권 제41호 2022. 8. 11.)
- 미국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제도
- 우리나라 촉법소년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2022-14호(통권 제40호 2022. 7. 28.)
- 프랑스의 원자력 재도약을 위한 정책방향 및 시사점
2022-13호(통권 제39호 2022. 7. 14.)
- 바이든 행정부의 산불대응전략
- 미연방 산불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2022-12호(통권 제38호 2022. 6. 23.)
- 일본의 230만 디지털인재 양성 확보 계획
- 미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사책을 중심으로
2022-11호(통권 제37호 2022. 6. 9.)
-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미국·호주의 대응전략
-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2022-10호(통권 제36호 2022. 5. 26.)
-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국제사회 및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2022-9호(통권 제35호 2022. 5. 12.)
- 일본 사립대학의 공립화: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까?
2022-8호(통권 제34호 2022. 4. 28.)
- 미국의 국가전략 관련 최근 동향
-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 변화를 중심으로
2022-7호(통권 제33호 2022. 4. 14.)
- 미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준비 현황,
LA 사례를 중심으로
2022-6호(통권 제32호 2022. 3. 24.)
-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의 세제지원제도
2022-5호(통권 제31호 2022. 3. 10.)
- 영국의회 차원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2022-4호(통권 제30호 2022. 2. 22.)
- 일본의 청년 지원정책
-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2022-3호(통권 제29호 2022. 2. 10.)
- 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 소개
2022-2호(통권 제28호 2022. 1. 25.)
-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을 중심으로
2022-1호(통권 제27호 2022. 1. 11.)
-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
2021-24호(통권 제26호 2021. 12. 28.)
- 일본의 의회 선거제도와 헌법 개정 논의
2021-23호(통권 제25호 2021. 12. 14.)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랑스의 탈석탄 정책 현황
2021-22호(통권 제24호 2021. 11. 23.)
-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
-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선택
2021-21호(통권 제23호 2021. 11. 9.)
- 일본의 스마트농업
2021-20호(통권 제22호 2021. 10. 26.)
- 미국의 바이오헬스 생태계 발전 사례
- 주(州)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2021-19호(통권 제21호 2021. 10. 12.)

| ISSN 2765-1657 |

발 간 등 록 번 호
31-9720112-001764-14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2022 -18호 통권 제44호



현안

외국에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오유빈*

미국은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제정하였고, 9월 12일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함. 동 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부터 추진했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BBB)”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7,390억 달러(약 926조원)의 예산을 투자해 △전기차 보급 확대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산 전기차 생산 및 판매를 확대하고 전기차 생산에 대한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자 관련 세액공제 조항을 포함함. 따라서 현재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과 기후변화 정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I. 시작하며

- 2022년 8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¹⁾이 정식 통과됨. 「IRA」는 단순한 경제 관련 법률이 아니고 기후변화, 의료보건 및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으로 알려짐.²⁾ 특히 기후변화 정책과 전기차(이하 EV)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1 미국 정부. 2022.9.16. 인용: <https://www.govinfo.gov/content/pkg/BILLS-117hr5376enr/uslm/BILLS-117hr5376enr.xml>

2 Quartz. 2022.9.16. 인용: <https://qz.com/emails/daily-brief/1849421975/bidens-signature-bill-becomes-law/>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 해외자료조사관(영미 담당) ☎ 02-6788-4067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BBB)」 법안은 과다한 지출 규모에 대한 의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함. 이 법안의 재원 규모를 축소하고 수정하여 새로 나온 법이 「IRA」임.
-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³⁾는 총 7,390억⁴⁾ 달러 규모의 법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EV 보급 확대, 처방약 가격 인하, 부자세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는 대형 법임.
- 「IRA」는 기후변화에 대한 비중이 큰 법으로 미국 일부 언론 및 관계자들은 동 법을 기후변화 관련 정책으로 평가하기도 함. 우리나라에서는 「IRA」가 통과되기 전부터 국내 EV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음.
- 이 보고서에서는 「IRA」의 주요 내용 중 EV, 배터리 부문 및 기후변화에 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 마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II. 법의 주요 내용

- 「IRA」는 EV와 친환경 에너지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의약품 가격과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또한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해 공정한 세금제도가 정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백악관의 자료에 따르면 「IRA」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음의 4가지임.⁵⁾
 - 청정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조(Create Clean Energy jobs)
 - 공정한 조세법 구축(Make the Tax Code Fairer)
 - 미국 제조업의 회복(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 의료보건 비용절감(Lower Health Care costs)

3 CNN. (2022.8.17). Biden Signs Inflation Reduction into Law.

4 일부 자료에서는 7,400억 달러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자료들이 업데이트 되면서 정확한 수치가 변경되고 있기 때문임.

5 백악관. 2022.9.16. 인용: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8/19/fact-sheet-the-inflation-reduction-act-supports-workers-and-families/>

「IRA」의 항목별 지출 규모



주: 그린은행: 청정에너지 기술 촉진을 위한 투자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은행

자료: United States Studies Centre. 2022.9.16. 인용: <https://www.ussc.edu.au/analysis/by-the-numbers-why-new-bill-is-the-most-important-climate-action-in-us-history>

-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서명한 후 백악관은 「IR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함.
 -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됨.
 - 「IRA」는 처방 의약품 가격과 의료보험료를 낮추고 에너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미국 역사상 기후변화 대책 중 가장 적극적인 대응책임.
 -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미국 전역에 노조 가입이 가능하고 처우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
 - 국가 적자 규모를 감축시키고 최상위 부자들과 기업들이 적절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함. 연간 수입이 40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됨.
- 미국 민주당은 「IRA」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미국 내 에너지 생산에 투자하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4% 감축시켜 미국의 제조업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⁶⁾
-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9월 12일, 북미산 EV 상대 세액공제 조항이 들어간 「IRA」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음.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백악관에 청정에너지 혁신 및 이행 사무실(White House Office on Clean Energy Innovation and Implementation)을 설치하는 것으로 「IRA」의 에너지 및 인프라

6 민주당. 2022.9.16. 인용: https://www.democrats.senate.gov/imo/media/doc/inflation_reduction_act_one_page_summary.pdf

조항 등의 시행과 관련한 정책 결정 절차를 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⁷⁾

III. 부문별 주요 내용

1. EV 및 배터리

- EV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EV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승용차는 55,000달러, SUV와 픽업, 밴 등은 8만 달러 이하로 제한함.
 - 또한 가계 연간소득이 15만 달러(부부합산 30만 달러)가 넘는 경우 EV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함.
- 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기술 투자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ITC) 혜택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적용 세율을 30%로 상향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미국산 EV 생산 및 판매를 확대하여 EV 관련 중국의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세액공제 등의 법률 조항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우려가 되는 국가(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및 핵심광물을 사용한 EV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배터리 및 핵심광물의 40% 이상⁸⁾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⁹⁾
 - EV에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 가공된 핵심광물을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하면 절반(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북미(캐나다 포함)에서 생산, 조립된 부품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나머지 절반을 받을 수 있음.

7 백악관. 2022.9.16. 인용: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2/09/12/executive-order-on-the-implementation-of-the-energy-and-infrastructure-provisions-of-the-inflation-reduction-act-of-2022/>

8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이 비율을 2027년까지 점차적으로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임.

9 CRS. (2022.8.24). Clean Vehicle Tax Credits i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2. 기후변화 및 에너지¹⁰⁾

- 과거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EV와 배터리 관련 세액공제 및 보조금은 미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으로도 볼 수 있음.¹¹⁾
- 현재 중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기후변화 등 환경보호에 있어 두 나라 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협력 제안을 거절해옴.
 - 이러한 상황에서 「IRA」를 통해 미국의 기후변화 대처 전략의 방향이 수정됨.
 - 미국은 현재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EV와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중국과 경쟁함으로써 환경보호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취하고자 함.
- 「IRA」는 다음과 같이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2050년까지 최대 1.9조 달러의 기후변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것.
 - 탄소 배출량 감소, 제조업의 청정에너지 사용 제품 및 친환경적 조치 등을 위해 약 3,69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됨.
- 기후변화 대응에도 재생에너지 투자, EV 구매, 주택 개조 등을 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 「IRA」에 포함됨. 기후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RA」의 청정에너지 관련 주요 내용과 규모는 다음과 같음.¹²⁾

주요 내용	세부사항
친환경에너지 발전 지원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업체 등에 600억 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및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 효율 가전 구입 리베이트	열펌프 등의 기타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 구입 시 14,000달러의 직접적인 소비자 리베이트 제공
태양열 설치 세액공제	가정에서 지붕에 태양열 설치 시 30% 세액공제(약 740만 가구)
EV 구매 세액공제	신차는 최대 7,500달러까지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까지 세액공제

10 백악관. 2022.9.16. 인용: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8/15/by-the-numbers-the-inflation-reduction-act/>

11 BBC. (2022.8.17). Biden Signs climate, Tax and Health Bill into Law.

12 PBS. (2022.8.17). What the Inflation Reduction Act Does for Green Energy.

- 전체 금액 중 3,750억 달러가 기후변화 대응에 쓰일 예정이며, 이는 연방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투입한 금액 중 역대 최대 금액임.
 - 이 법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의 탄소 배출을 2005년 대비 약 40%에서 최대 44%까지 낮출 것으로 전망함.
 -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으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EV 구매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주택개선 등을 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임.
- 일반 가정은 물론 사업체에도 2022년부터 2032년 사이에 태양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짐.¹³⁾ 일반 가정에서 온수기,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할 때에도 에너지 효율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14,000달러의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¹⁴⁾

IV.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 국내 배터리 업계는 「IRA」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미국의 「IRA」가 중국 배터리 산업을 견제하는 입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호재이나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관련에 있어서는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세계 최대 EV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이 북미에 생산거점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북미 생산거점을 확보해 온 우리나라의 일부 배터리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겠다는 예측이 나옴. 그러나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IR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생산에 사용하는 중국산 원자재 비율을 줄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음.
- 반면, 자동차 업계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EV에만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면서 비상이 걸림.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그룹의 EV 전량이 국내에서 생산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법안이 서명되기 전부터 우리 정부는 「IRA」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13 PV-Magazine. 2022. 9.16. 인용: <https://pv-magazine-usa.com/2022/08/12/whats-in-the-inflation-reduction-act-for-the-solar-industry/>

14 CBS News. (2022.9.13). Biden's Inflation Law Offers Up to \$14,000 for Home Upgrades, Here's how to Qualify.

달라는 요청을 해온 것으로 알려짐. 최근에는 정부에서 파견단을 보내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해당사항에 대한 논의도 진행함.

- 이러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미국 일부 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 투자유치활동을 시작하고 있음.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투자를 하면 「IRA」를 통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투자를 유치하여 주 경제 활성화까지도 노리고 있음.
- 또한, 미중 양국의 경쟁구도 속에서 미국의 세액공제 및 보조금 등 친환경 정책의 성과를 관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태양열 시설 설치 시 제공되는 세액공제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 구매 시 리베이트 제공 등의 혜택은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임.

V. 맺으며

- 최근 「IRA」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 서명 후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 권력서열 1~3위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이 모여 「IRA」 입법 기념행사까지 진행하였고¹⁵⁾, 11월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미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IRA」가 FTA 및 WTO 등의 통상규범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였고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협력해 WTO 제소 등 공동대응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힘¹⁶⁾. 우리 산업에 있어 태양광 분야는 긍정적, 배터리 업계는 신중한 입장, 자동차 업계는 악재로 판단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상황으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IRA」 자체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있는 만큼 중국의 반응과 향후 움직임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15 백악관. (2022.9.13). 인용: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2/09/13/remarks-by-president-biden-on-the-passage-of-h-r-5376-the-inflation-reduction-act-of-2022/>

16 Korea Times. (2022.9.13). 'Inflation Reduction Act is in Clear Violation of KORUS FTA'.

2022 -17호 통권 제43호



현안

외국에선?

중국의 「대만백서」 발간과 동아시아 외교·안보

김선재*

중국은 22년 만에 발간한 「대만백서」에서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을 통일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함. 동 백서는 △대만 민진당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는 대만의 탈(脫)중국 정책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심화 △시진핑 3연임의 정당성 확보 등 복합적인 대내외 정세를 그 배경으로 함. 대만해협을 둘러싼 정세는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외교·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 차원에서의 '의회외교'를 적극 활용해 대만과의 교류를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행보를 가속화 중임. 우리로선 주요국의 對대만 의회외교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국회 차원에서의 외교·안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함.

I. 들어가며

- 2022년 8월 중국 국무원(정부)은 「대만문제와 신시대 중국의 통일사업(台湾问题与新时代中国统一事业)」 제하의 백서를 공개함.¹⁾ 중국은 1993년과 2000년에 대만문제에 관한 백서를 각각 발간한 바 있으며, **금번 백서는 22년 만에 발간된 것임.**
- 동 백서는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을 지칭) 갈등의 첨예화 가운데 발간됨. 중국은 백서를 통해 조국통일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으며, **필요시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 역시 재확인함.**

1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台湾事务办公室), 신문판공실(新闻办公室). (2022. 「대만문제와 신시대 중국의 통일사업(台湾问题与新时代中国统一事业)」, 2022.8.23. 인용: http://www.gwytb.gov.cn/zt/zyjszl/baipishu/202208/t20220810_12459866.htm)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 해외자료조사관(중국 담당) ☎ 02-6788-4336



- 양안 갈등은 동아시아 지역의 외교·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음. 본 보고서는 상기 문제제기에 기반해 백서의 발간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동 현안에 대한 대만 및 주요국의 대응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의회외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II. 「대만백서」의 주요내용과 발간배경

1. 주요내용

- (개요) 백서는 총 14,446자(약 35p) 분량으로, 2000년 발간된 백서보다 3,000자 가량 증가함. ‘하나의 중국 원칙(一个中国的原则)’²⁾을 거론하며 비교적 정제된 단어를 구사한 지난 백서에 비해, 금번 백서는 ‘조국통일(祖国统一)’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어조가 매우 강경해짐.

「대만백서」 제목 및 목차 비교(2000년과 2022년)

분류	2000년	2022년
제목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문제」	「대만문제와 신시대 중국의 통일사업」
목차	1. 하나의 중국 사실과 법리적 기초	1.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변화도 용납될 수 없는 것
	2. 하나의 중국 원칙은 평화통일 실현의 기초이자 전제	2. 중국공산당은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확고히 추진
	3. 중국 정부는 단호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호할 것	3. 조국의 완전한 통일 과정은 막을 수 없는 것
	4. 양안관계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한 약간의 문제	4. 신시대(新时代) 신장정(新征程) 위에서 조국통일을 추진
	5.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문제	5. 조국 평화통일 실현의 밝은 전망

2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 정부의 원칙.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미국 측은 “대만해협 양 측의 모든 중국인들은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언급한 바 있음. 1979년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함.

- **(대만 독립세력의 분쇄)** 백서는 ‘대만독립(台独)’을 추구하는 분열세력(分裂勢力)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현재 대만의 집권정당인 민진당(民進黨)이 외부세력과 결탁하여 중국을 도발 중이라고 강조함.
 - 민진당의 행보는 양안관계의 긴장을 일으키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바, 평화통일을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될 장애물이라고 설명
- **(외세의 일체 간섭을 불허)** 미국 등 외부세력이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대만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 중이라고 비판함.
 - 미국이 △대만과 공식적인 왕래 강화 △무기 판매 지속 △미국-대만 간 군사적 유착 심화 △기타 국가들을 대만 문제에 끌어들이는 등의 행위를 열거하는 등 종전 백서에 비해 비판 수위를 강화
- **(필요시 무력 사용을 불사)** 평화통일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면서도, 무력의 포기를 약속하진 않을 것이며 필요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함. 실제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대만 지역에서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대규모 포위훈련을 실시함.

중국의 對대만 포위훈련(8.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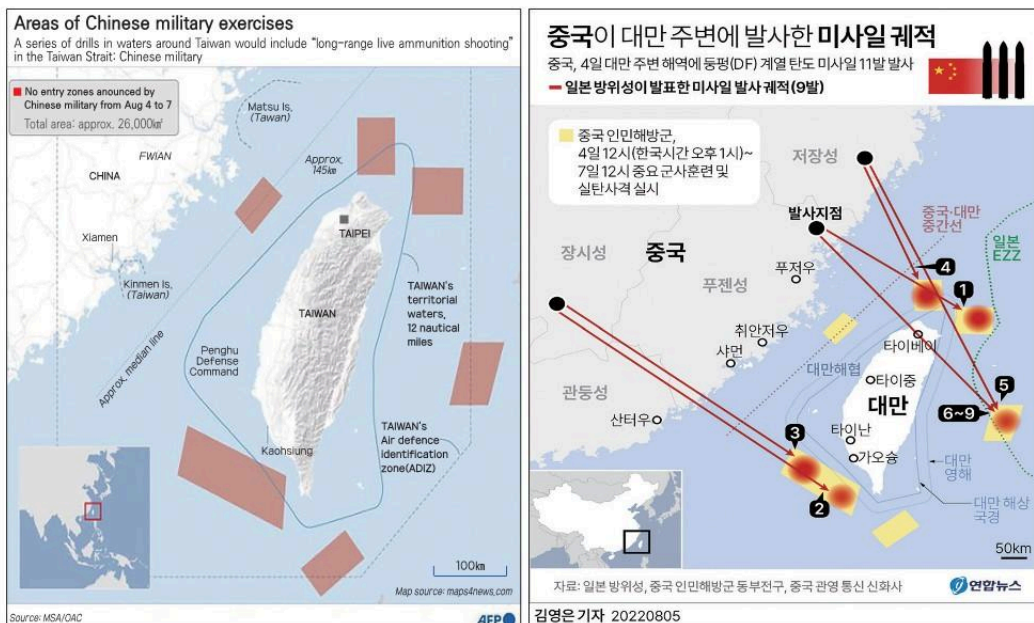


그림 출처: AFP News Agency. (2022.8.4). Chinese military exercises; 연합뉴스. (2022.8.5). [그래픽] 중국이 대만 주변에 발사한 미사일 궤적.

- **(통일 이후 대만정책의 변화 예고)** 백서는 이전과 같이 ‘일국양제(一国两制)’의 원칙 하에 통일 이후 대만 지역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홍콩과 유사한 수준의 관여를 할 것임을 시사함.
 - 통일 이후 ‘중국 중앙정부는 군대나 행정 당국자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를 처음으로 삭제³⁾
 - 또한 국가의 주권과 안전 등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대만은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함.⁴⁾ 현재 중국 내 특별행정구는 홍콩과 마카오뿐이며, 금번 백서에서 대만을 처음으로 포함
- **(시진핑 집권기 對대만정책의 성과를 강조)** 마지막으로 백서는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중국의 대만정책이 거둔 성과를 부각시킴으로써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을 홍보함.
 -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공산당의 강력한 지도 아래, 양안관계의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하는 등 조국통일의 과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

2. 발간배경

- 앞선 절에서 다룬 백서의 주요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백서발간은 △대만 민진당의 집권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시진핑 3연임의 정당성 확보 등 복합적인 대내외적 환경을 그 배경으로 함.
- **(대만 민진당의 집권)** 2016년 집권한 대만 민진당의 차이잉원 정권은 아세안 국가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향정책’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며, 미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탈(脫)중국 행보를 가속화하는 추세임.⁵⁾
-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심화)**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 등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체화 중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쿼드(Quad)와 오키우스(AUKUS) 등 동맹국과의 연대를 활용해 對중국 압박을 추진 중이며, 자유와 민주 등 가치를 공유하는 대만과의 협력 역시 강화 중임.⁶⁾

3 Reuters. (August 11, 2022). China withdraws promise not to send troops to Taiwan if it takes control of island.

4 세계일보. (2022.8.12). 中, ‘대만특별행정구’ 지정 계획… 대만 “우리가 미래 결정” 거부.

5 김선재, 김수한. (2022). “탈중국을 위한 대만 남향정책의 지속과 변화: 균형과 편승의 동학”, 『분석과 대만』 제6권 제1호, pp. 66-114.

6 김선재. (2022).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 2022-1호.

- **(시진핑 3연임의 정당성 확보)**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기존엔 5년씩 2회만 가능)을 폐지한 시진핑은 2022년 하순 개최될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3연임을 공식화하고자 하며, 연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만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⁷⁾

III. 대만의 대응과 주요국의 의회외교

1. 대만의 대응

- 대만은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포위훈련에 맞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매우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 차이잉원은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적 국가들이 각각 대만에 대한 군사훈련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⁸⁾
 - 중국의 포위훈련이 끝난 직후, 대만 육군은 8월 9일부터 3일간 155mm 곡사포 78문과 120mm 박격포 6문을 동원한 포사격 훈련을 실시⁹⁾
- 8월 25일 대만 행정원(정부)은 2023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13.9% 증가한 5,863억 대만달러(약 25조 9,200억 원 / GDP의 2.4% 상당)로 책정함.¹⁰⁾
 - 동 예산은 주로 비대칭전(asymmetric warfare, 드론 및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공군력의 증강을 포함) 능력 향상을 통한 중국의 잦은 도발을 저지하는 데 활용될 예정
- 한편 여론조사 결과 78%의 대만인은 중국의 군사훈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과반수(53%)는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환영한다고 응답함. 또한 80%의 대만인은 중국이 고수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¹¹⁾, 대만의 對중국 감정 역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7 Richard Haass. (August 15, 2022). "Xi Jinping's Guns of August",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BC News. (August 24, 2022). Why is Taiwan so important to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8 美國之音. (2022.8.26). 蔡英文：中國軍演和俄羅斯入侵烏克蘭正在“破壞和威脅世界秩序”.

9 대만 중앙통신사(中央社). (2022.8.7). 陸軍9日及11日重砲射擊演練 驗證部隊戰力.

10 BBC中文. (2022.8.26). 台灣2023年國防預算大增 無人機研發成新亮點.

11 대만 민의기금회(台灣民意基金會). (2016.8.16). 如果中共武力犯台，台灣人對日本提供各種必要援助的信心.

2. 주요국의 의회외교

- 중국이 對대만 포위훈련을 시작한 직후, G7과 EU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의 위협적 행동을 비판함.¹²⁾ 특히 의회 차원의 교류는 정상적·일상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대만과 의회외교를 지속할 것을 시사함.
 - 미국과 일본의 의원들이 이미 방문한 데 이어, 유럽과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의 의원 역시 하반기에 대만을 방문할 예정

양안관계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및 對대만 의회외교 일정(2022년)

지역명	양안관계에 대한 입장	對대만 의회외교 일정(2022년) ¹³⁾
미국	• 중국의 위협적 행동(실탄훈련 및 경제적 강압) 등을 비판 • 의회 의원의 해외방문은 정상적·일상적 행동	•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문(8.2) • 에드 마키 상원의원 방문(8.14) •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방문(8.25)
유럽		• 독일 연방하원 대표단 방문 예정(10월) • 영국 하원 의원 방문 예정(11-12월) • 유럽의회 통상위원회 대표단 방문 예정(12월)
일본		• 초당파 의원모임(일화의원간담회) 방문(8.23)
캐나다		• 무역위원회 소속 의원 8인 방문 예정(10월)
러시아	펠로시의 대만방문 비판	-

- 이에 대해 중국 측은 G7과 EU 외교사절을 즉각 조치했으며, 이들이 발표한 성명은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이자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며, 공공연한 정치적 도발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함.¹⁴⁾
 - 아울러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들이 대만과 공식적 교류를 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의회외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피력¹⁵⁾
- 상술한 국가와는 달리, 러시아는 중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대만에 대한 의회외교에도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함.

12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EEAS). (August 4, 2022). G7 Foreign Ministers' Statement on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13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 (2022.8.18). 無懼北京施壓加、德、英國會團也將訪台.

14 중국 외교부(中國外交部). (2022.8.5). 外交部就七國集團外長和歐盟外交與安全政策高級代表發表涉台聲明向有關歐洲國家和歐盟駐華使節提出嚴正交涉.

15 CBC News. (August 23, 2022). Chinese embassy warns of 'forceful measures' after parliamentarians announce plans to visit Taiwan.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무책임한 정치인이며, 그의 대만 방문은 철저히 계획된 도발이라고 비판하며 중국의 입장을 지지¹⁶⁾

IV. 관찰 및 함의

-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대만을 둘러싸고 매우 첨예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특히 미국은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중국을 압박하는 기존의 전략을 고수·강화 중임. 의회 차원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체화 중인 추세인 바, 미·중 간 갈등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군함의 대만해협 파견을 상시화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8일에도 순양함 두 척이 대만해협을 통과¹⁷⁾
 -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¹⁸⁾에는 중국이 야기하는 국가안보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내에 통합대응(cross-functional)팀을 설치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기¹⁹⁾
- 유럽 역시 △미국과의 가치(인권, 민주, 자유 등) 공유 △대만 반도체에 대한 의존²⁰⁾ 등을 감안해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대만과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의회외교가 부각될 수 있음.
- 우리로선 대만문제에 관한 미·중 간 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주요국의 對대만 의회외교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국회 차원에서의 외교·안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16 SCMP. (August 17, 2022). 'Irresponsible politician': Putin breaks silence on Pelosi's Taiwan trip.

17 CNN. (August 28, 2022). US sends two warships through Taiwan Strait, in first transit since Pelosi trip.

18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FISCAL YEAR 2023: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19 연합뉴스. (2022.8.24). 美의회, 中견제입법 강화...국방부에 '對中통합대응팀' 신설 추진.

20 Politico. (August 5, 2022). Why Europe needs Taiwan.

2022 -16호 통권 제42호

2022 -15호 통권 제41호

2022 -14호 통권 제40호

2022 -13호 통권 제39호

2022 -12호 통권 제38호

2022 -11호 통권 제37호

2022 -10호 통권 제36호

2022 -7호 통권 제33호



현안

외국에선?

미국의 국가전략 관련 최근 동향

-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 변화를 중심으로

오 만*

미국은 약 4년 주기로 국가전략의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전략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각 군의 지휘관 및 주요 참모들은 이를 바탕으로 작전계획을 수립함.

2022년 초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서가 발간 및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위협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여 현재 미 의회에 기밀문서 형태로 제출된 상태이고, 애초 계획보다 공개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 보고서에서는 냉전시대 이후 미국의 국방전략의 변화, 최근 10여 년간 오바마-트럼프-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의 내용을 소개하고 러시아의 도발에 따른 2022년 미국 국방전략의 변화를 예측해 보고자 함.

I. 들어가며

-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의 핵심분야 중 하나인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은 군 구조, 병력 현대화, 의사결정과정, 군사적 지원 인프라 및 필요한 자원(자금 및 인력)과 관련된 군사 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됨.
- 미국은 대략 4년 주기로 국방전략을 작성하여 공개(전문 또는 요약문)하고 있으며, 2018년 트럼프 정부가 발간한 국방전략 이후 바이든 정부의 국방전략이 2022년 초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어, 지난 3월 28일 미 의회에 기밀문서(비공개)로 제출한 상태임.¹⁾
- 이 보고서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 변화를 살펴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략 및 작전개념 수정에 미칠 영향과 인도-태평양 전략 수정의 불가피성으로

1 Department of Defense. (March 28, 2022). DoD Transmits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인한 우리의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해 보고자 함.

II. 냉전시대 이후 미국의 국방전략

1. 바이든 행정부 이전 10년간의 국방전략의 변화

- 2015년 6월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 군사전략(National Military Strategy)'²⁾에서는 강대국 경쟁이 부활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천명하였으며²⁾, 이 사안은 2017년 12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³⁾의 핵심이 되었고, 결국 2018년 1월 미국의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⁴⁾을 통해 미국의 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을 중국 및 러시아와의 패권경쟁에 초점을 맞춘 주요 전략으로 재편하였음.
-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2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승인 후 시행해왔고, 중국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최첨단 기술을 선점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북한의 위협 역시 미국의 주요한 안보 과제로 설정하였음. 러시아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변국으로 남을 것' 정도로 간략하게 언급하였음.⁵⁾

2.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

- 2021년 3월 작성된 바이든 행정부의 '임시 국가안보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⁶⁾
 - 미국은 극단적 민족주의, 민주주의의 후퇴, 중국과 러시아 등 독재국가, 기술혁명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는 미국인의 삶의 양상을 변화시킬 것임.
 - 따라서 강대국 및 국지도발을 감행하는 적, 폭력적이고 범죄적인 비국가 행위자들 및 극단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감염병, 사이버 공격, 허위정보 유포 등 미국인을

2 Department of Defense. (June, 2015).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5.

3 Office of the President. (December, 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4 Department of Defense. (January, 2018).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5 Department of State. (November 4, 2019). A FREE AND OPEN INDO-PACIFIC.

6 The White House. (March 2021).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위협하는 요소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침서를 제공함.

- 2021년 5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바이든 국방부는 트럼프 국방부의 ‘강대국 경쟁’이라는 문구 대신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⁷⁾이라는 새로운 문구를 사용하는 등 중국⁸⁾에 대한 접근방식을 달리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의 틀과는 상반된 모습임.
- 또한, 국방부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용어 사용은 바이든 행정부가 생각하는 대중국 전략과 일치한다고 설명하였음. 즉, 미국과 중국이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영역, 예를 들면 과학기술, 무역, 그리고 군사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전략적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전략적 경쟁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때에는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을 ‘라이벌’이라고 표현하며 강대강 경쟁을 주장했던 트럼프와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임.
-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중국은 미국의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던 조 바이든⁹⁾은 당선 후 중국에 대해 다소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앞서 소개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하고 오히려 발전시켜, 2022년 2월 11일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공개함.
-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직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을 탈퇴¹⁰⁾하는 등 중국 견제에 필요한 동맹을 강화하는 정책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했다고 평가받았고, ‘미국’ 자체를 가장 우선시 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존재가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는 미국의 ‘유일한 비대칭적 강점’이자 패권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언급하며 미국-인도-일본-호주의 협의체인 쿼드(Quad)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그룹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음.¹¹⁾
 -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러시아는 1회 언급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러시아의 언급 자체가 없음.

7 Politico. (October 5, 2021). Biden's era of 'strategic competition'

8 각종 전략서나 지침서에 러시아도 비중있게 언급되었지만, 분석결과 현재까지는 중국에 대한 언급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하지만, 조만간 발간된 '2022년 미국 국방전략'에는 러시아의 언급 비중이 훨씬 증대될 것으로 예측됨.

9 Washington Post. (May 2, 2019). Biden says China is 'not competition for us,' prompting pushback from both parties.

10 Politico. (Jan 23, 2017). Trump scuttles Trans-Pacific trade pact.

11 The White House. (Feb 11, 2022).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관련 대응 내용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문건보다 더 비중있게 다루었는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인권침해 대응,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의 도발과 관련, 일본과 한국의 확장역지력 및 조정통제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미국과 그 동맹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저지하고 격퇴(defeat)할 것"¹²⁾이라는 단호한 표현을 쓰고 있음.

III.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에 미칠 영향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국방관련 정책이나 전략들이 중국을 주로 언급하고, 러시아에 대한 언급 횟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2008년 러시아-그루지아(조지아) 전쟁, 2014년 크림반도의 불법 합병, 지속적인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사이버 공격, 선거 방해, 허위정보 유포 등), 현재 진행 중인 돈바스 지역에서의 영토분쟁,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최근 20여 년 동안 러시아가 자행한 전쟁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미국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상당함.¹³⁾
- 미국의 국방전략이 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는 사이, 러시아는 유럽에서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버렸음. 2022년 초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주로 한 새로운 국방전략을 공개하려던 와중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방전략의 추가적인 수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1. 회색지대(Gray Zone)¹⁴⁾에 대한 공격적 사고방식과 교전전략

- 미국은 사이버, 외교, 정보환경을 아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하고, 회색지대의 적들에 대한 전략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회색지대에서 러시아와 경쟁하는 것은

12 The White House. (Feb 11, 2022).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13 Atlantic Council. (February, 2022). The Next National Defense Strategy Must Get Russia Right.

14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지역, 정치 용어로는 어느 초강대국의 세력권에 속해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함.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를 포함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대항하는 것 이상이며 미국방부 역시 자체 회색지대 활동을 실행함으로써 공세를 취할 수 있음.¹⁵⁾

- 미국은 하이브리드 전쟁¹⁶⁾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해 미 국방부는 정보전, 사이버전, 심리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또한, 양성된 전문가들은 전쟁 대상자 및 행위자, 적성국, 주요 불법 행위자에 대한 정보활동 및 인도적 지원, 정보 환경의 감시 및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회색지대에서 적대적 행동에 대한 아군의 전략적 이해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함.¹⁷⁾

2. 동맹국 및 외교·군사적 파트너와의 유의미한 통합

- 현행 NATO의 작전수립절차는 NATO 회원국들의 방위력 개선과 전투력 강화를 위해 유효할 수 있지만, 이것이 주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일종의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는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함.
- 따라서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공동 전략 및 작전계획 발전, 상호운용성 및 지휘통제 능력의 발전 및 향상을 위해 기존과 다른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음. 보안수준 설정의 어려움과 정보공유에 대한 보안상 제약으로 인해 미국의 작전계획을 주요 동맹국들과 통합하고 공유하는 것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미국이 동맹국의 역량을 활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님.¹⁸⁾
- 미국은 위에서 설명한 ‘2018년 국방전략’에서 명시한 것처럼 **각기 다른 전구(戰區, theater)¹⁹⁾에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적과 동시에 전략적으로 싸워야 함**. 따라서 미국이 이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신속하게 동맹국과 파트너를 미국의 계획과 운영에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²⁰⁾
-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미래 유럽의 안보를 위해 NATO 회원국들의 유의미한 통합은 필수적이며, NATO 회원국으로서 동맹국들과의 군사동맹

1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rch 10, 2022). Renewed Great Power Competition: Implications for Defense—Issues for Congress.

16 다양한 유형이 혼재된 전쟁의 형태. 이 전쟁은 군사력과 기술력, 정치력, 경제력을 총망라한 개념이며, 재래전, 비정규전, 사이버전, 전자전 및 미디어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전쟁이 혼재되어 있음.

17 Starling, Wetzel, and Trott. (December, 2021). Seizing the Advantage.

18 Atlantic Council. (February, 2022). The Next National Defense Strategy Must Get Russia Right.

19 단일의 군사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지상, 해양, 공중작전이 실시되는 지리적 영역

20 REUTERS. (March 1, 2022). U.S. can focus on two theaters – Indo-Pacific and war in Europe, official says.

강화를 위해 미국은 ① 정보와 첩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② 유럽의 동맹국들을 미국의 작전 및 전략계획 수립 과정(합동전략계획, 작전수행개념 발전, 작전구상 등)에 참여시키며, ③ 동맹국에 필요한 전쟁장비와 물자를 제공하고, ④ '실질적인' 러시아의 위협을 격퇴하기 위해 **미군병력을 재배치**하여 요구되는 작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NATO대응군(NATO Reaction Forces)을 강화하며, ⑤ 유럽지역 동맹군들의 역동적인 부대 전개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⑥ **연합 및 다국적 훈련의 질을 향상**시켜 미국의 정치적·군사적 목표를 달성하여야 함.²¹⁾

3.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Global Defense Posture)

- 미 국방부는 각기 다른 전구(戰區)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대와 가용한 전력을 전진배치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음. 따라서 미국은 뚜렷한 성과물이 없었던 '2021년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대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음.²²⁾
- 미국은 여전히 중부사령부(CENTCOM)²³⁾의 책임지역인 중동 및 그 주변에 많은 순환병력을 파견하고 있음. 이는 대테러, 대반란 및 이란의 견제라는 여전히 유효한 목표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과 인도-태평양 양쪽 전역에 적절한 병력 및 장비를 재할당하거나 재배치**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인도-태평양 지역**은 해군에 초점을 둔 전투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고, **유럽은 지상군(육군) 위주**의 운용이 더 가용할 것임. 또한, 즉각적인 대비태세를 위해 해병대가 명에 따라 언제 어디든 상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함.²⁴⁾ 즉, 효율성이 중요하며, **임무형지휘(Mission Command)**²⁵⁾를 통해 다수의 전장을 통제해야 하는 지휘부담을 덜 수 있음.
 -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특수작전부대의 대테러 임무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에 이익이 되는 지역과 임무에 더 많은 **특수작전부대를 재배치**해야 함.

21 Atlantic Council. (February, 2022). The Next National Defense Strategy Must Get Russia Right.

22 Department of Defense. (November 29, 2021). "DoD Concludes 2021 Global Posture Review"

23 미국 국방부의 통합전투사령부로, 중동과 아프리카의 이집트, 중앙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플로리다주 탬파에 본부를 두고 있음.

24 Starling, Wetzel, and Trott. (December, 2021). Seizing the Advantage.

25 독일어인 Auftrag(임무)와 taktik(지휘)의 합성어로 시작된 용어로, 불확실성이 뚜렷한 전장에서 예하 지휘관에게 수단을 위임하고, 행동의 자율권을 부여하며, 달성가능한 임무를 제시함으로써 자유롭고 창의적인 전술 행동을 보장하는 지휘체계.

-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사이버전 부대를 배치하고, 러시아 네트워크에 대한 유연한 접근법을 개발함으로써 필요할 때 러시아에 대한 공격적인 사이버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함.
- 마지막으로, 러시아 관련 정보수집에 더 많은 정보감시 자산을 집중하여야 함. 항공기에 탑재된 정보감시 자산은 지난 20년간 중부사령부 책임지역에 배치되어 왔는데, 이러한 플랫폼이 유럽에 배치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중요 정보를 생산하고 유럽의 동맹 및 파트너와의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IV. 나가며

-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은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항하는 러시아의 위협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다시 보여주었음. 이에 따라 미국의 '2022년 국방전략서'는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와 경쟁하고 적대적 행위를 저지하며 격퇴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해야 할 것임. 또한, 주변국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위협을 인식하고 회색지대에서 교전, 동맹국과의 연합, 유럽에서의 전투준비태세에 대한 주요 내용을 명확히 하는 포괄적인 방어전략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2023 회계연도 예산을 줄인다고 발표하였지만, 국방부 배정 예산은 7,730억 달러(약 928조원)로 전년대비 약 8.1% 증액하였음. 여기에는 러시아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산 10억 달러, 유럽 방위구상과 NATO 지원 등 관련 예산 69억 달러 등이 포함²⁶⁾되어 있을 정도로 미국의 국방전략의 목표와 방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임.
- 끝으로, 이 사태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병력 및 자산배치에 변화를 가져온다면 주한미군의 재배치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바, 강력한 한미동맹을 주장하는 차기 정부의 방위협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6 The White House. (March 28, 2022). Statement by President Joe Biden on the FY 2023 Budget.

현안

외국에선? 발간 목록

- 미국의 국가전략 관련 최근 동향
-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 변화를 중심으로
2022-7호(통권 제33호 2022. 4. 14.)
- 미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준비 현황,
LA 사례를 중심으로
2022-6호(통권 제32호 2022. 3. 24.)
-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의 세제지원제도
2022-5호(통권 제31호 2022. 3. 10.)
- 영국의회 차원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2022-4호(통권 제30호 2022. 2. 22.)
- 일본의 청년 지원정책
-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2022-3호(통권 제29호 2022. 2. 10.)
- 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 소개
2022-2호(통권 제28호 2022. 1. 25.)
-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을 중심으로
2022-1호(통권 제27호 2022. 1. 11.)
-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
2021-24호(통권 제26호 2021. 12. 28.)
- 일본의 의회 선거제도와 헌법 개정 논의
2021-23호(통권 제25호 2021. 12. 14.)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랑스의 탈석탄 정책 현황
2021-22호(통권 제24호 2021. 11. 23.)
-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
-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선택
2021-21호(통권 제23호 2021. 11. 9.)
- 일본의 스마트농업
2021-20호(통권 제22호 2021. 10. 26.)
- 미국의 바이오헬스 생태계 발전 사례
- 주(州)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2021-19호(통권 제21호 2021. 10. 12.)
-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과 아프가니스탄 사태 대응 전략
2021-18호(통권 제20호 2021. 9. 28.)
- 양육비 이행확보 정책, 영국에서는 어떻게?
2021-17호(통권 제19호 2021. 9. 14.)
- 건설현장 '추락사고', 영국은 어떻게?
2021-16호(통권 제18호 2021. 8. 24.)
- 일본의 후기고령자 의료비 제도:
현역세대를 배려한 재검토
2021-15호(통권 제17호 2021. 8. 10.)
- 프랑스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2021-14호(통권 제16호 2021. 7. 27.)
- 영 케어러 지원: 영국, 호주 사례
2021-13호(통권 제15호 2021. 7. 13.)
- 일본의 고향납세: 세금으로 고향에 기부할까?
2021-12호(통권 제14호 2021. 6. 22.)
- 영국 정부의 '외로움'과의 싸움:
'외로움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2021-11호(통권 제13호 2021. 6. 8.)
-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미·중 관계
2021-10호(통권 제12호 2021. 5. 20.)
- 미국의 학교폭력 무관용 정책
2021-9호(통권 제11호 2021. 5. 11.)
- 의사결정권의 양성평등:
일본의 여성 참여를 위한 정책적 대응
2021-8호(통권 제10호 2021. 4. 27.)

| ISSN 2765-1657 |

발 간 등 록 번 호

31-9720112-001764-14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2022 -8호 통권 제34호



현안

외국에선?

일본 사립대학의 공립화: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까?

구해경

일본의 사립대학은 순수한 사학재단에 의해 설립된 대학이 있는 반면, 지자체가 설립 비용을 부담한 사립대학이 있음. 후자는 부담비율에 따라 공사협력 혹은 공설민영방식으로 설립된 것임. 2004년 「지방독립행정법」 시행 이후 공립대학으로 전환한 공설민영 사립대학은 2009년 고치공과대학을 필두로 2022년 4월 기준으로 11개이며, 2023년 4월 아사히카와대학의 공립 전환이 예정되어 있음.

공립대학은 목표에 의한 관리와 평가 시스템을 통해 업무 계속, 조직존속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음. 지방 사립대학의 공립대학 전환 결과, 정원 충족률이 높아졌으며 지역 청년인구의 유출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대학입학 인구 감소로 인한 일시적인 연명책에 불과할 수도 있으며, 취업 등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과제는 남아 있음.

일본의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효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공영형 사립대 등의 도입 논의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함.

I. 시작하며

- 일본은 대학입학 연령(만 18세) 인구가 1992년 정점(205만 명)을 찍었으며, 매년 감소하여 2040년은 88만 명으로 예측됨.¹⁾ 일본에서는 국공립대학의 인기가 높으며, 수도권 사립대학보다는 지방의 국공립대학을 지망하려는 경향이 있음. 특히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도시 간 이동이 감소한 영향으로 지방 국공립대학의 지원자가 증가하였음.²⁾

1 일본 총무성. 2022.4.20. 인용: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573858.pdf

2 교교생 신문. (2022.1.15). 2022년도 입시 - 국공립대 지망자는 지역 지향, 취직 중시 - 히토쓰바시·도쿄공립대·오사카대학이 인기, 오사카 공립대가 급상승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 해외자료조사관(일본 담당) ☎ 02-6788-4068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 일본에서는 지방공공단체가 지역 활성화 차원의 대학 유치를 위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필요한 부동산이나 자금 등 유형·무형의 공유재산을 제공하여 개교한 대학이 있음. 공사협력방식 또는 공설민영방식으로 설립되었으나, 문부과학성의 분류로 사립대학에 해당함.
- 1958년 일본사회사업대학을 필두로 많은 학교들이 탄생했으나, 운영이 잘 되는 곳이 있는 반면 경영의 어려움 등으로 폐교하는 사례까지 나타남.
- 대학입학 연령 인구 감소와 대도시권 대학 집중 현상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이들 학교들은 2009년 고치공과대학을 필두로 공립대학 전환을 실시했음. 2022년 4월까지 총 11개 대학이 공립대학 전환을 완료했으며, 아사히카와대학이 2023년 4월 공립대학으로 개교가 예정되어 있음.
- 보고서는 일본의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공립대학으로의 이행 이후의 효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공영형 사립대 또는 정부책임형 사립대 도입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임.

II. 사립대학의 공립화 전환 사례

1. 공사협력대학과 공설민영대학

- 공사협력대학은 문부성 설치심의회 대학계획분과회가 1986년도부터 1992년도의 18세 인구 급증 시기의 고등교육의 계획적인 정비 방향성을 제시한 '1986년도 이후 고등교육의 계획적 정비에 대해서'에서 '①지방공공단체가 토지나 교사 등의 건물 및 설비의 일부를 현물 또는 자금으로 준비, ②지방공공단체는 학교법인에 대해 경상비의 일부를 보조'³⁾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공사협력대학 신설은 1997년까지 84개를 넘었음.⁴⁾
- 공설민영대학의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대학 설치를 계획하고 설치 경비 전부를 공비로 충당한 경우' 공설민영대학이라 부름.

3 다카하시 히로토, (2000). 공립대학을 둘러싼 정책에 관한 역사적 고찰, 교육제도학 연구(2000권 7호)
https://www.jstage.jst.go.jp/article/jjseso/2000/7/2000_17/_pdf

4 도리야마 आयु미, (2017). 사립대학의 공립대학화: 그 배경과 과정. 公共政策志林, 5, 119-132.

- 제1호는 전후 연합군최고사령부(GHQ)와 당시의 후생성이 국가시설을 사용하여 설립한 일본사회사업대학임.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노동과 건강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후생노동성이 산업의과대학을 설립했음.
- 지방공공단체가 설립한 학교로 규슈보건복지대학, 도쿠시마 의료복지전문학교 등 특화된 성격을 가진 대학이 많으며, 학비는 일반 사립대학과 동등한 정도임.

2. 사립대학의 공립화 전환 현황

- 1997년 4월 개교한 고치공과대학은 토지, 건물 건설비용을 고치현이 부담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공설민영방식으로 개교했으나, 저출생과 청년의 이공계 기피의 심화로 정원미달 사태도 발생하였음. 2004년 공립대학법인제도 창설이 담긴 「지방독립행정 법인법」이 시행되어 공립대학법인 이행 논의가 본격화되고, 2009년 4월 공립대학으로 전환함. 그 후 잇달아서 공립대학 이행이 이루어졌고, 최근의 사례로 2022년 4월 도쿠야마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전환하면서 슈난공립대학이 되었음.

사립대학의 공립화 전환 현황

학교명	설립	공립화	설치단체	비고
고치공과대학	1997년 4월	2009년 4월	고치현	공설민영
시즈오카문화예술대학	2000년 4월	2010년 4월	시즈오카현	공설민영
메이오대학	1994년 4월	2010년 4월	북부 광역 시정촌권 사무조합	공설민영
공립돗토리환경대학	2001년 4월	2012년 4월	돗토리현·돗토리시	공설민영
나가오카조형대학	1994년 4월	2014년 4월	니가타현 나가오카시	공설민영
후쿠치야마공립대학	2000년 4월	2016년 4월	교토부 후쿠치야마시	공사협력
시립야마구치도쿄이과대학	1995년 4월	2016년 4월	야마구치현 산요노노다시	공사협력
나가노대학	1966년 4월	2017년 4월	나가노현 우에다시	공사협력
공립스와도쿄이과대학	2002년 4월	2018년 4월	스와 광역 공립대학사무조합	공사협력
공립지토세과학기술대학	1998년 4월	2019년 4월	홋카이도 지토세시	공설민영
슈난공립대학	1971년 4월	2022년 4월	야마구치현 슈난시	공설민영
아사히카와대학(예정)	1968년 4월	2023년 4월(예정)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일반 사립

자료: 일본 총무성, 2022.4.20. 인용: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76205.pdf

III. 사립대학의 공립화 과정 및 평가

1. 공립대학화 과정

- 지방자치단체, 대학, 전문가, 시민들과 소통하여 지역 전체의 고등교육의 미래상과 '진정 지역에 필요한 대학인가?' 등 해당 사립대학의 존립목적까지 감안하여 논의 되었음.⁵⁾
 - 돗토리환경대학의 공립화 검토 시에는 전문가(대학경영 및 환경 각 분야), 교육 관계자, 재계, 돗토리현 부지사, 돗토리시 부시장 등에 의해 돗토리 환경대학 개혁안 평가·검토위원회가 꾸려짐. 동 위원회는 동 대학이 자주적으로 설치한 '돗토리 환경대학검토위원회'의 제언을 바탕으로 지역에서의 대학이라는 높은 자산 가치나 지역 내 학생의 진학학교를 고려하여 공립대학화를 위한 검토를 신속하게 개시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함. 이 결론에 의해 공립대학화를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음.⁶⁾
- 검토위원회의 제언을 바탕으로 규모의 축소, 법인 분리 등을 단행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립대학으로 전환하였음.
 - 일반 사립대학으로 설립된 아사히카와대학은 2016년 아사히카와시가 시내에 유치한 도카이대학 예술공학부 폐지로 인해, 새로 설립을 검토하던 시립대학 구상에 참여하는 형태로 공립대학법인 이행 의사를 표명함. 이후 2021년 공립대학 전환이 승인 되었음.⁷⁾ 아사히카와시와 아사히카와대학은 2023년 4월을 목표로 대학과 단기 대학, 그 외의 학교를 법인분리하고 대학과 단기대학만 공립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표명 하였음.

2. 공립대학의 운영

- 일본의 공립대학법인은 2021년 5월 1일 기준으로 79개(총 98개 공립대학 중 88개 공립대학이 이에 해당)이며⁸⁾, 2022년 4월 공립대학으로 재개교한 슈난대학을 포함하면 공립대학법인은 80개임.

5 도리야마 아유미. (2017). 사립대학의 공립대학화: 그 배경과 과정. 公共政策志林, 5, 119-132.

6 돗토리시. 2022.4.20. 인용: <https://www.city.tottori.lg.jp/www/contents/1288841799658/>

7 아사히카와시. 2022.4.20. 인용: https://www.city.asahikawa.hokkaido.jp/700/735/42315/d073238_d/fil/210526_gaiyou.pdf

8 일본 문부과학성. 2022.4.20. 인용: https://www.mext.go.jp/a_menu/koutou/kouritsu/index.htm

공립대학법인 현황



자료: 문부과학성. 2022.4.20. 인용: https://www.mext.go.jp/a_menu/koutou/kouritsu/index.htm

- 다른 지방독립행정법인과 마찬가지로 공립대학법인에도 ‘운영 관련 재량권을 대학에 인정하는 대신 운영의 성과를 엄격히 요구’⁹⁾했음. 법인을 설립하는 지자체는 중기목표를 법인 측에 제시하고 또한 해당 중기목표기간 종료 시에는 중기목표의 방향성을 포함한 법인경영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가 되어 있으며, 법인화 공립대학은 평가제도에 의한 목표 관리에 의해 업무 운영의 개선 및 효율화가 요구됨.¹⁰⁾

3. 공립대학 이행 후의 긍정적 평가

- 문부과학성은 ‘사립대학 공립화 시의 경제상의 영향분석 및 공립화 효과의 “시각화”에 관한 데이터’¹¹⁾를 공표하고 있음.
 - 1997년 개교한 고치공과대학은 2009년 공립화를 실현했는데, 지지부진했던 경쟁률(2008년 1.6:1)이 공립화 첫해인 2009년에는 12.6:1이었으며, 최근에는 평균 5:1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 신규 학과 신설 등으로 정원도 점차 증가하여 2021년은 2,300명(2009년도 1,783명)까지 증가하였음.¹²⁾

9 나가오카시. ‘나가오카조형대학 공립대학법인화 검토위원회 보고서’. 2022.4.20. 인용: <https://www.city.nagaoka.niigata.jp/shisei/cate01/zoukei-houjinka/file/houkokusyo.pdf>

10 도쿄도. 2022.4.20. 인용: https://www.metro.tokyo.lg.jp/tosei/hodohappyo/press/2021/09/22/documents/02_01.pdf

11 일본 문부과학성. 2022.4.20. 인용: https://www.mext.go.jp/a_menu/koutou/kouritsu/1412396.htm

12 일본 문부과학성. 2022.4.20. 인용: https://www.mext.go.jp/content/20220325-mxt_daigakuc01-1412396_1.pdf

- 2000년 개교한 나루미대학은 2016년 공립화를 실현하면서 교명을 후쿠치야마 공립대학으로 바꾸었음. 2015년 1.5:1(2014년 0.7:1)이었던 경쟁률이 공립화로 33.4:1까지 상승하였으며, 2021년은 3.1:1로 추이하고 있음.¹³⁾
- 공립화로 학생들이 납부해야 할 학비가 대폭 감소하였음. 슈난공립대학의 경우 기존 사립대 시기의 학비가 연간 88만 엔이었으나, 공립화 이후에는 535,800엔으로 감소함.¹⁴⁾
- 메이오대학은 2009년도 취업률이 58.7%였으나 2010년 공립화 후에 조금씩 상승하여, 2021년 3월 취업률은 87%에 달하였음.¹⁵⁾

공립화를 이행한 사립대학의 경쟁률 변화 현황

대학			경쟁률	
	개교	법인화	전년	공립화 시행 첫째
고치공과대학	1997	2009	1.6	12.6
시즈오카문화예술대학	2000	2010	8.7	11.9
메이오대학	1994	2010	1.2	2.7
공립돗토리환경대학	2001	2012	1.7	10
나가오카조형대학	1994	2014	1.8	5.7
후쿠치야마공립대학	2000	2016	1.5	33.4
시립야마구치도쿄이과대학	1995	2016	7.4	23
나가노대학	1966	2017	2.4	10
공립스와도쿄이과대학	2012	2018	5.3	7.9
공립지토세과학기술대학	2008	2019	5	10.9
슈난공립대학	1971	2022	0.65	7.66

자료: 일본 문부과학성, 2022.4.20. 인용: https://www.mext.go.jp/a_menu/koutou/kouritsu/1412396.htm. 슈난공립대학은 아사히신문, (2022.3.28). 슈난공립대, 지원배율 7.66배, 재구성.

4. 해결해야 할 과제

- 사립대학의 공립화가 대학입학 연령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며 '연명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¹⁶⁾

13 일본 문부과학성, 2022.4.20. 인용: https://www.mext.go.jp/content/20220325-mxt_daigakuc01-1412396_6.pdf

14 슈난공립대학, 2022.4.20. 인용: <https://www.shunan-u.ac.jp/documentos/%E5%85%AC%E7%AB%8B%E5%8C%96.pdf>

15 메이오대학, 2022.4.20. 인용: <https://www.meio-u.ac.jp/career/companies/>

16 가시와자키시, 2022.4.20. 인용: <https://www.city.kashiwazaki.lg.jp/material/files/group/5/gaiyou.pdf>

- 공립화로 인한 브랜드가치 상승¹⁷⁾으로 타지역 입학생이 증가하여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의 입학률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해결도 과제임.
- 류코쿠 대학의 사토 류코 교수는 '학생의 졸업 후의 고용을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 등 공립화의 의의와 필요성을 제대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림.¹⁸⁾

IV. 맺음말

- 일본 정부는 대입 수험생의 수도권 대형 대학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대규모 대학의 정원 관리를 엄격하게 시행해 왔음. 그 결과 2020년도에는 90% 이상의 사립대학에서 입학 정원을 충족시켰음.¹⁹⁾
- 또한 정부는 2020년 제2기 '지역·사람·일 창생 종합전략'²⁰⁾에서 지방대학에 의한 지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공공단체와 지방대학을 연계하여 고용창출·청년의 지역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음.²¹⁾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학의 안정이 필요하며 사립대학의 공립대 전환은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방 사립대학의 공립화는 경영난에 빠진 사립대학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도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²²⁾ 사립대학의 공립화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있으나 현재진행형이며, 공립대학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육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음. 대학입학 연령 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진 우리도 지방 사립대학 문제가 교육계의 숙제처럼 남아 있으므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는 작업은 사립대학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17 닛케이BP컨설팅. (2013.12.18). 대학의 '브랜드'란?

18 WEDGE Infinity. (2020.8.6). 늘어나는 경영난 사립대학의 공립화 "연명책" 우려

19 일본 문부과학성. 2022.4.20. 인용: <https://www.mext.go.jp/kaigisiryō/content/000119821.pdf>

20 내각관방 '지방창생' 사이트. 2022.4.20. 인용: <https://www.chisou.go.jp/sousei/info/pdf/r1-12-20-senryaku.pdf>

21 일본 총무성. 2022.4.20. 인용: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76205.pdf

22 니혼케이자이신문. (2021.3.2). 공립화 모색하는 지방 사립대, 경영 안정은 했으니 지역 부담에 불안

협안

외국에선? 발간 목록

- 일본의 사립대학의 공립화: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까?
2022-8호(통권 제34호 2022. 4. 28.)
- 미국의 국가전략 관련 최근 동향
-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 변화를 중심으로
2022-7호(통권 제33호 2022. 4. 14.)
- 미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준비 현황,
LA 사례를 중심으로
2022-6호(통권 제32호 2022. 3. 24.)
-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의 세제지원제도
2022-5호(통권 제31호 2022. 3. 10.)
- 영국의회 차원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2022-4호(통권 제30호 2022. 2. 22.)
- 일본의 청년 지원정책
-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2022-3호(통권 제29호 2022. 2. 10.)
- 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 소개
2022-2호(통권 제28호 2022. 1. 25.)
-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을 중심으로
2022-1호(통권 제27호 2022. 1. 11.)
-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
2021-24호(통권 제26호 2021. 12. 28.)
- 일본의 의회 선거제도와 헌법 개정 논의
2021-23호(통권 제25호 2021. 12. 14.)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랑스의 탈석탄 정책 현황
2021-22호(통권 제24호 2021. 11. 23.)
-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
-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선택
2021-21호(통권 제23호 2021. 11. 9.)
- 일본의 스마트농업
2021-20호(통권 제22호 2021. 10. 26.)
- 미국의 바이오헬스 생태계 발전 사례
- 주(州)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2021-19호(통권 제21호 2021. 10. 12.)
-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과 아프가니스탄 사태 대응 전략
2021-18호(통권 제20호 2021. 9. 28.)
- 양육비 이행확보 정책, 영국에서는 어떻게?
2021-17호(통권 제19호 2021. 9. 14.)
- 건설현장 '추락사고', 영국은 어떻게?
2021-16호(통권 제18호 2021. 8. 24.)
- 일본의 후기고령자 의료비 제도:
현역세대를 배려한 재검토
2021-15호(통권 제17호 2021. 8. 10.)
- 프랑스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2021-14호(통권 제16호 2021. 7. 27.)
- 영 케어러 지원: 영국, 호주의 사례
2021-13호(통권 제15호 2021. 7. 13.)
- 일본의 고향납세: 세금으로 고향에 기부를?
2021-12호(통권 제14호 2021. 6. 22.)
- 영국 정부의 '외로움'과의 싸움:
'외로움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2021-11호(통권 제13호 2021. 6. 8.)
-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미·중 관계
2021-10호(통권 제12호 2021. 5. 20.)
- 미국의 학교폭력 무관용 정책
2021-9호(통권 제11호 2021. 5. 11.)

| ISSN 2765-1657 |

발 간 등 록 번 호
31-9720112-001764-14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2022 -9호 통권 제35호



현안

외국에선?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국제사회 및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선재*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강도 높은 도시봉쇄조치 등이 포함된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 중임. 최근 상하이와 베이징 등 대도시에도 정책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국제사회 및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으로 부상함.

막대한 경제·사회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크게 △공산당 집권정당성 확보와 시진핑의 3연임, △권위적 정치구조, △의료 인프라 부족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즉, 제로코로나 정책은 단순한 방역지침이 아닌 중국의 국내정치적 배경이 결합된 결과물로 볼 수 있음.

중국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것이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우리로선 제로코로나 정책을 둘러싼 국제정세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중국 중앙·지방정부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과 교민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I. 들어가며

-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도시봉쇄 및 확진자 색출 등이 중심이 된 제로코로나 정책을 시행 중임. 제로코로나로 인해 받게 되는 경제·사회적 타격¹⁾과 일부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강력한 정책을 유지 중인 것에 대해 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제로코로나 정책은 단순한 방역지침이 아니라, 중국 특유의 정치적 구조와 시진핑의 3연임 등 국내정치적 배경이 결합된 사안임. 상하이와 베이징 등 대도시에도 여과 없이

1 2022년 4월 현재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3억 7천만 명 상당의 인구가 제로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참고: Reuters, (April 13, 2022). China is at risk of self-inflicted recession)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 해외자료조사관(중국 담당) ☎ 02-6788-4336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적용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입고 우리 기업과 현지 교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의 국제적 현안으로 부상함.

- 본 보고서는 상기 문제제기에 기반해 중국이 제로코로나를 고수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함. 나아가 제로코로나가 국제사회 및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국회 내 외교정책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II. 제로코로나의 개념과 적용 사례

1. 개념

- 제로코로나의 중국식 명칭은 **동태청명(动态清零)**이며, '다이나믹 제로코로나(Dynamic zero-COVID)'로도 불림.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역 봉쇄와 격리, 전체 주민에 대한 PCR검사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통해 감염자를 '제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함.
- 2021년 12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측은 제로코로나 정책이 현재 중국 코로나19 방역의 총지침(总方针)이자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²⁾ 일각에서 방역의 방식이나 효용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 중인 상황임.

2. 적용 사례

- **(상하이)**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상하이시 정부는 3월 28일³⁾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봉쇄조치를 단행함. 4월 11일부터는 △봉쇄통제구역(封控区, 7624곳)과 △관리통제구역(管控区, 2460곳), △예방구역(防范区, 7565곳)으로 분류하여 봉쇄하는 세부적 조치를 시행 중임.

2 중국 국무원, "动态清零"和"零感染"有何不同——国务院联防联控机制发布会针对疫情防控社会关注答疑解惑, 2022.5.2. 인용: http://www.gov.cn/xinwen/2021-12/12/content_5660202.htm

3 2022년 3월 27일 기준 상하이의 확진자는 총 3,500명이며, 중국 전체 감염자 중 약 60%를 차지함.

제로코로나 대응을 위한 상하이의 봉쇄구역 관리(4월 11일 기준)⁴⁾

분류	기준	관리	해제 요건
봉쇄통제 구역	7일 이내에 확진자가 발생한 구역	△ 7일 봉쇄 + 7일 자가건강관찰 △ 봉쇄 기간 외출 불가, 방문서비스 제공	△ 14일 동안 추가 확진자가 없고, △ 13일째 시행하는 구역 내 거주민의 PCR검사가 모두 음성일 경우 봉쇄가 해제되고 예방구역으로 전환
관리통제 구역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구역	△ 7일 자가건강관찰 △ 원칙적으로 외출 불가 △ 지정 구역 내에서 비접촉으로 배달물자 수령 가능	△ 7일 동안 추가 확진자가 없고, △ 6일째 시행하는 구역 내 거주민의 PCR검사가 모두 음성일 경우 봉쇄가 해제되고 예방구역으로 전환
예방구역	14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구역	△ 외출가능(봉쇄통제/관리통제구역 방문 불가) △ 집회 인원 제한	-

- **(베이징)** 상하이의 봉쇄가 심화되자, 수도인 베이징의 시민들 역시 봉쇄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며 식료품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남.
- 실제로 4월 25일 인구 350만 명 규모의 베이징 차오양(朝阳)구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정부 당국은 '임시관리통제구역(临时管控区)'을 설정하는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사실상 봉쇄 조치를 내렸으며 현재 봉쇄 지역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⁵⁾
- 상하이와 베이징 외에 △선전(深圳)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 등 대도시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봉쇄 조치가 꾸준히 시행 중임.

III. 중국이 제로코로나를 고수하는 이유

1. 공산당 집권정당성 확보와 시진핑의 3연임

- 중국은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왔으며, 실제로 일부 지역(광둥성, 산둥성, 허베이성 등)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성공한 바 있음.
- 시진핑은 제로코로나의 성과가 △공산당의 성공(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과시 등)이자 △개인이 이룩한 성취(personal achievement)라고 인식함. 즉,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4 중국 국무원. 上海首批“三区”划分名单11日公布. 2022.4.30. 인용: http://www.gov.cn/xinwen/2022-04/11/content_5684531.htm

5 중국 광명일보(光明日报). (2022.4.29). 北京市朝阳区新增临时管控区域.

인해 제로코로나를 포기하는 것은 곧 당과 개인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임.⁶⁾

- 상하이 봉쇄가 한창이던 4월 7일에도 시진핑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국제사회에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였다면서, 방역에 금메달이 있다면 중국이 한 개 받아야 된다는 한 외국 선수의 발언을 직접 소개⁷⁾
- 4월 29일 시진핑이 주재한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선 향후에도 제로코로나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천명⁸⁾

- 한편 시진핑은 다가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20차 당대회에서 그간 최고지도자의 2연임(임기 10년) 제한 규칙을 깨고 3연임을 도모하고 있는 바, 연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⁹⁾

2. 권위적 정치구조

- 시진핑 집권 이후 최고지도자 1인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됨. 각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지침을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권위적인 상하관계가 조성 중이며, 이는 제로코로나 정책에도 예외 없이 적용됨.
 - 중국은 통상 공산당 소속의 관료들이 지방에서 경험을 쌓으며 중앙정부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바, 중앙정부의 제로코로나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조기에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
 - 이와 관련해 NYT는 제로코로나 정책이 시진핑 1인의 의지에 기초한다면서, 수천만 명의 중국인을 희생시킨 마오쩌둥식 정치캠페인에 비유¹⁰⁾

3. 의료 인프라 부족

- 중국의 14억 인구 중 고령자는 2억 6,700만 명이고, 만성질환자는 2억 6천만 명 가량임.¹¹⁾ 중국 학계와 언론 등은 정부가 제로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 의료 인프라가 붕괴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6 Foreign Policy. (April 27, 2022). Who Profits From China's Zero-COVID Strategy?

7 중국 신화사(新华社). (2022.4.8). 习近平：在北京冬奥会、冬残奥会总结表彰大会上的讲话.

8 중국 신화사(新华社). (2022.4.30). 中共中央政治局召开会议 分析研究当前经济形势和经济工作 审议《国家“十四五”期间人才发展规划》.

9 The Heritage Foundation. (April 22, 2022). Xi Jinping's "Zero-COVID" Gambit.

10 The New York Times. (April 13, 2022). China's 'Zero Covid' Mess Proves Autocracy Hurts Everyone.

11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2022.4.14). 评论：为何说中国坚持“动态清零”是科学且必要的？

- 량완넨(梁万年)¹²⁾은 △노년층의 낮은 백신접종률과 △의료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제로코로나 정책을 견지해야 하며, 오미크론 변종이 가져올 위험성을 감안할 때 이는 “14억 명의 사람들을 위한 보험”과 같다고 강조함.¹³⁾

IV. 국제사회 및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1. 국제사회

-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구를 보유한 상하이의 봉쇄로 인해 물류 대란이 야기되는 등,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음.¹⁴⁾
 - 코로나19로 야기된 글로벌 해운의 운임 지수의 상승이 아직 종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하이의 봉쇄로 인한 물류 효율성의 저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가중시킬 가능성¹⁵⁾
- **(미중 갈등의 심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갈등의 영역 역시 경제, 무역, 군사 등 전 방위적으로 확산 중임. **코로나19에 대한 미중의 상반된 대응 방식¹⁶⁾ 역시 양국 갈등을 첨예화하는 요인으로 부상함.**
 - 미국 측은 중국의 자의적인(arbitrary) 법집행과 코로나19 봉쇄 등을 근거로 3단계 여행경보 수준인 여행 자제(Reconsider)를 발령했으며, 상하이총영사관의 비(非)필수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자진철수를 명령¹⁷⁾
 - 중국 외교부는 자진철수를 결정한 미국 측의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하며 ‘엄정한 교섭(통사 대사 초치에 해당)’을 시행했다고 설명¹⁸⁾

12 칭화대 교수.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코로나19대응팀(国家卫健委疫情应对处置工作领导小组)의 전문가팀장 겸임.

13 SCMP. (April 24, 2022). Disaster or zero-Covid? China has no choice for now, top health official says.

14 Fortune. (April 19, 2022). 'It's probably worse than Wuhan': Experts warn China's COVID-19 lockdowns will once again cripple global supply chains.

15 KOTRA 중국 상하이무역관. (2022.4.4). 상하이 봉쇄로 인해 촉발되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16 이와 관련, 중국 관영매체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에서 약 20만 명의 고아가 발생했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미국의 방역정책을 비판한 바 있음. 특히 미국 내 ‘코로나 고아’의 발생이 뚜렷한 인종 차이가 생기는 점을 예로 들며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의 이중성을 지적함(참고: 중국 인민일보. (2022.5.4.). 美政府正欠下更多人权债.). 이는 신장위구르 지역 등의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는 최근 정세의 연장선 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17 Travel.State.Gov. China Travel Advisory. 2022.5.1. 인용: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traveladvisories/traveladvisories/china-travel-advisory.html>

18 중국 외교부. (2022.4.9). 外交部发言人赵立坚就美国国务院宣布“授权撤离”美驻上海总领馆人员事答记者问.

- 아울러 제로코로나 정책은 WHO의 지도원칙과 부합하며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2021년 중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은 10만 명당 0.4명으로 미국의 1/606에 불과하다고 강조¹⁹⁾

2. 한중관계

- **(한중 간 경제·무역 관계에 영향)** 상하이의 봉쇄로 인해 3,000여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됨.²⁰⁾ 특히 봉쇄가 시작되면서 한국의 식품·화장품 기업 생산공장의 가동이 전면 중지됐으며, 4월 12일 이후 부분 가동을 재개했으나 가동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임.
- 이와 관련해 4월 29일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의 봉쇄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조업 제한, 물류 및 공급망 문제 등 우려 사항을 전달²¹⁾
- **(우리 교민의 불안 심화)** 강력한 봉쇄 조치로 인해 우리 교민이 느끼는 우울감과 무력감 역시 심화되고 있음. 특히 약 2만 8천여 명의 교민이 거주하는 상하이의 경우 중국의 봉쇄 조치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상하이에 거주 중인 한 우리 교민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중국이 봉쇄를 예고했음에도 우리 영사관이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했으며,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영사관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²²⁾

참고: 현지 우리 유학생 인터뷰

√ 강력한 봉쇄정책으로 인해 약 50일 동안 외출을 하지 못했음. 봉쇄가 조금씩 해제되면서, 현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1시간 정도 산책이 가능함. 도시규모 및 인구밀도 등에 따라 물자공급의 방식은 달랐지만, 전반적으로 열악하진 않았다고 생각함. 영사관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으나, 담당 영사들은 메신저 및 SNS 등을 활용해 현지 교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향후 제로코로나에 대비한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 매뉴얼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4.29, 지린(吉林)성 에 거주 중인 한국인 유학생)

√ 베이징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봉쇄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교민들의 우려 역시 커지고 있음. 다행히도 본인이 거주하는 베이징 하이딩(海淀)구는 아직 봉쇄되지 않은 상태이며, 대학교 역시 대면수업을 진행 중임. 쌀 등 비상식량은 미리 구비하였으며, 아직 대사관 차원에서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이 온 적은 없음.(4.29, 베이징에 거주 중인 한국인 유학생)

19 중국 외교부. 2022년4월25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2022.5.2. 인용: https://www.fmprc.gov.cn/fyrbt_673021/jzshl_673025/202204/t20220425_10673513.shtml

2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4월 12일 외교부 정례브리핑. 2022.5.2. 인용: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03272>

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관련 우리기업 피해 최소화 및 한-중 경제통상 협력 방안 논의. 2022.4.30. 인용: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559>

22 청와대 국민청원.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상해 영사관을 고발합니다(청원시작: 4월 21일). 2022.5.1. 인용: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5235> 중앙일보. (2022.4.21). "교민 단톡방만도 못한 영사관" 봉쇄된 상하이 교민의 분노.

V. 관찰 및 함의

- 제로코로나 정책은 중국 공산당의 집권정당성과 시진핑의 3연임 문제 등과도 연관이 된 현안인 바, 앞으로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단, 정책이 장기화 될수록 중국이 받는 경제적 타격은 커지는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딜레마 극복을 위한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목해야 함.**
- 4월 27일 리커창 총리가 물류교통이 시장경제의 핏줄이나 민생보장의 중요한 버팀목이라면서 물류의 정상화(택배 운영 재개 등)를 주문²³⁾한 것은, 제로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마비를 우려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²⁴⁾
- 한편 제로코로나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 역시 나타나고 있는 바, **미국이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 중국의 과도한 방역 문제를 비판하며 양측 간 대립이 첨예화될 가능성도 있음.**
- 우리로선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지속·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과 교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 매뉴얼을 구축·보완할 필요가 있음.**²⁵⁾ 아울러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제로코로나 정책의 추이와 조정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 기업과 교민의 불편 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해야 함.

23 중국 인민일보, (2022.4.28). 李克强主持召开国务院常务会议.

24 이와 관련해 왕이밍(王一鸣,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제로코로나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방역 조치를 더욱 세밀하게 조정하여 물류 및 공급망을 원활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함.(참조: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 (2022.4.24). 王一鸣建议采取更强有力的政策举措).

25 '현지 우리 유학생 인터뷰(6p)' 참조.

협안

외국에선? 발간 목록

-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국제사회 및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2022-9호(통권 제35호 2022. 5. 12.)
- 일본의 사립대학의 공립화: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까?
2022-8호(통권 제34호 2022. 4. 28.)
- 미국의 국가전략 관련 최근 동향
-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 변화를 중심으로
2022-7호(통권 제33호 2022. 4. 14.)
- 미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준비 현황,
LA 사례를 중심으로
2022-6호(통권 제32호 2022. 3. 24.)
-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의 세제지원제도
2022-5호(통권 제31호 2022. 3. 10.)
- 영국의회 차원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2022-4호(통권 제30호 2022. 2. 22.)
- 일본의 청년 지원정책
-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2022-3호(통권 제29호 2022. 2. 10.)
- 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 소개
2022-2호(통권 제28호 2022. 1. 25.)
-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을 중심으로
2022-1호(통권 제27호 2022. 1. 11.)
-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
2021-24호(통권 제26호 2021. 12. 28.)
- 일본의 의회 선거제도와 헌법 개정 논의
2021-23호(통권 제25호 2021. 12. 14.)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랑스의 탈석탄 정책 현황
2021-22호(통권 제24호 2021. 11. 23.)
-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
-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선택
2021-21호(통권 제23호 2021. 11. 9.)
- 일본의 스마트농업
2021-20호(통권 제22호 2021. 10. 26.)
- 미국의 바이오헬스 생태계 발전 사례
- 주(州)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2021-19호(통권 제21호 2021. 10. 12.)
-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과 아프가니스탄 사태 대응 전략
2021-18호(통권 제20호 2021. 9. 28.)
- 양육비 이행확보 정책, 영국에서는 어떻게?
2021-17호(통권 제19호 2021. 9. 14.)
- 건설현장 '추락사고', 영국은 어떻게?
2021-16호(통권 제18호 2021. 8. 24.)
- 일본의 후기고령자 의료비 제도:
현역세대를 배려한 재검토
2021-15호(통권 제17호 2021. 8. 10.)
- 프랑스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2021-14호(통권 제16호 2021. 7. 27.)
- 영 케어러 지원: 영국, 호주의 사례
2021-13호(통권 제15호 2021. 7. 13.)
- 일본의 고향납세: 세금으로 고향에 기부를?
2021-12호(통권 제14호 2021. 6. 22.)
- 영국 정부의 '외로움'과의 싸움:
'외로움'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2021-11호(통권 제13호 2021. 6. 8.)
-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미·중 관계
2021-10호(통권 제12호 2021. 5. 20.)

| ISSN 2765-1657 |

발 간 등 록 번 호
31-9720112-001764-14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